

[2018 년도 2 학기]

[보험연금마케팅]

국민연금 개편안 및 재정안정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보험연금 대학원
이 원 혁 (2017720386)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장수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노인빈곤 증가 등)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이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최장기간 일자리의 근속기간(55~64 세): 2006 년 17 년 3.1 개월 → 2015 년 14 년 9.4 개월

또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9.6%(OECD 평균 12.6%)로 이는 노인 2 명 중 1 명은 가난하다는 말이다.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 등으로 파산자 4 명중 1 명은 노인이며, 이는 결국 노인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65 세[↑]): 44.6%('07) → 47.0%('09) → 48.6%('11) → 49.6%('12)

※ OECD 평균 노인빈곤율(65 세[↑]): 15.1%('07) → 12.8%('10) → 12.6%('12)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독보적인 세계 1 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보완하여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이름과는 달리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국민 기준으로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또한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급여수준은 월평균 40 만원 수준으로 낮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여 소득대체율이 향후 40% 수준까지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2 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 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도 도입초기부터 반복적으로 나왔고,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수적 개혁 또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했음에도, 국민연금의 저부담 - 고급여 구조에 따른 수지불균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II. 4 차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오전, 제 4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 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조합 방안				
	1안	2안	3안	4안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①	노후소득보장 강화②
• 소득대체율 기본모형	40% 유지 (국민 40+기초 12) 52%	40%+기초연금 40만원 (국민 40+기초 15) 55%	45% (국민 45+기초 12) 57%	50% (국민 50+기초 12) 62%
• 보험료율	9% 현행 유지 (직장가입자 4.5%)	9% 현행 유지	5년마다 1%p씩 인상 2031년 12%	5년마다 1%p씩 인상 2036년 13%
•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	2021년 30만원	2021년 30만원
• 실질급여액	86.7만원	101.7만원	91.9만원	97.1만원
• 실질대체율	34.7%	40.7%	36.8%	38.8%
• 소진시점	2057년	2057년	2063년	2062년

※실질급여액 및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자(250만원) 해당 소득대체율 25년 가입기준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2007년 연금개편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까지 인하 계획

자료 : 보건복지부

[1 안] 현행유지방안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현행 유지

⇒ 1안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개편안이라고 할 수 없다

[2 안] 기초연금 강화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40 만원으로 올린다.

⇒ 2안 또한 개혁의 대상인 국민연금은 손대지 않고 예산을 들여 기초연금만 인상하는 것이어서 역시 개편안이라고 할 수 없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기초연금이 40 만원이 되면 국민연금납부에 대한 저항이 심화될 수도 있다(9 월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약 38 만원 수준임)

[3 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①

소득 대체율을 더 이상 깎지 않고 올해 대체율인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5년마다 1%씩 올려서 2031년 12%까지 올린다.

[4안]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②

소득 대체율을 5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5년마다 1%씩 올려서 2036년 13%까지 올린다.

⇒ '3안'과 '4안'은 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 올리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재정안정에 필요한 인상이 아니라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필수적 절차일 뿐이다

III. 국민연금 개혁(재정안정화 측면)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과의 통합 등을 통한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통합방향에 대한 의견 보다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언급코자 함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이라는 제도 본연의 기능과 함께, 재정안정성을 양대 표상(表象)으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은 재정안정성이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이슈가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속도가 엇물리며 영향을 주는 구조로,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 속도가 앞당겨 진다.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기금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하는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이런 역상관 관계는 과거보다 정도가 커졌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 지향점은 제도 내적 수지균형 관점(제도 내의 계리적수지차(actuarial balance)에 초점을 두고, 기금규모·적립배율·부과방식비용률 등과 같이 재정수지에 따라 결정되는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 보다는 인구학적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보험료율 인상, ②소득대체율 인하, ③수급개시연령 상향 등과 같은 모수적 개혁을 실시했음에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적 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여력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저하 및 기대여명 증가에서 비롯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여력의 부족 문제는 시기적으로 제도적 여력 부족 문제보다 먼저 발생하여 그 시급성이 높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연금제도 내의 수지구조에 영향을 미쳐 제도적 여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존속마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인구학적 여력 확보 방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되어야 될 것이다.

인구학적 여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한 생산인구 확대는 기여기반의 증대(보험료 납부자 수 및 납부액 증가, 조세부담여력 증가 등)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 학적 여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지균형과 제도적 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기여기반이 확보될 경우, 적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며, 멈춰버린 세상이 아니라면 노인이 없을 수 없다. 노인을 위한 정책 중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임을 인식하여 좀 더 신중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